

기억과 기획의 동아시아

장지영*

[서평] 백영서(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나남출판, 304쪽

1. 비판적 지역주의의 유산

우리는 과연 ‘동아시아’인이었던 적이 있는가? 근본적이어서 도발적인 이러한 물음은 근래 수다하게 경험하는 소란들을 염두에 둘 때마다 함께 떠오를 수밖에 없는 듯하다. 한편에서 어떤 문화적 산물의 고유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에 똑같은 모습을 한 반발이 일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식민의 역사로부터 이어져 와 불식되지 못한 상흔이 그에 대한 접근과 처치에 따라 안팎의 분쟁으로 전화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잠시’ 휴지한 지 어느덧 칠십 년이 된 전쟁과 그로 인해 남겨진 분단이 ‘긴장’을 부단히 조성하여 반동적 대립 체제를 연명케 만든다. 이렇듯 반복적이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차원에서는 유독 주변국과 관련한 사안에서라면 국민국가가 중심을 이루는 사고 속에서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키우며 주체화하는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엮을 만한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웃한 타자의 존재는 그저 자기를 돌올하게 만들기 위한 배경이나 조역으로서만 유효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크게 번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신냉전기’

라 운위되는 상서롭지 못한 때에 지난 시대의 질곡들을 벗어던지지도 못한 채 병적인 혐오의 정서가 발산하는 분위기 안에서라면, 자칫 ‘동아시아’는 고정된 지리적 경계 아래에서만 하나로 묶여 가까스로 표상될 수 있을 뿐이라고 편향되게 여겨지기가 쉽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포괄적 범주는 예의 현상들이나 일국가적 정체성에 머무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지향되는 태도이자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꾸로 다른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론의 창신(創新)을 진중한 사명감으로 짊어져 온 백영서의 신간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나남출판, 2022)은 그 증좌이다.¹ 아시아 지식인 내부의 상호 참조(Inter-Asia referencing)를 강조해 왔던 저자는 이제 ‘기억으로서의 동아시아’와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를 포개어 놓으려 한다. 이 작업은 식민화 및 갖은 폭력과 억압들이 유래한 근대적 제약을 동아시아라는 표상을 바탕으로 넘어서려 했던 사유와 실천들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며, 결국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의 계보를 그려 내어 그것의 현재성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입론 자체의 정당성을 또한 강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도 할 것이다.

누구든 이러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동아시아’가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도 고정된 실체일 수 없었으며 또한 대응과 실천에 있어서도 그 래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어원상으로 보더라도 ‘아시아’ 혹은 ‘동양’이라는 어휘들은 그 시작점이 서구나 중국으로서 각기 달랐다고 해도 그것들이 가리키는 대상과 범주가 공

1 이 글에서 본서[백영서(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나남출판]의 서명을 언급할 경우에는 『대안체제의 길』로 축약하여 이르고, 본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기재한 쪽수만 본문 중 병기하도록 한다. 한편 대안체제론은 동아시아담론을 상위 유(類)로 두고 있는 한 종(種)으로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자를 비롯하여 『창작과비평』을 통해 발신된 것을 주로 가리킨다. 그런데 리부 대상인 저술이 대안체제론으로서의 성격을 내장한 동아시아담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 까닭에 본문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 두 어휘가 혼용되는 것을 억제하지는 않았다.

간, 지리적 경험의 확대에 따라 계속 변모해 왔다는 공통점을 띠고 있다. 또한 이른바 세계체제가 형성된 이래로 ‘진보라는 흐름에서 이탈하여 멈춰선 아시아’랄지 ‘보편적 질서를 참칭하는 서양에 맞서 새롭고 진정한 보편을 모색하는 동양’과 같이 그때마다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에 수반된 가치론적 배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한다.

… 지역은 지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지역을 호명하는 주체가 실천과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한 이웃 지역을 동아시아라 명명할 때는 지리적 범위에 어디가 속할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어떤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한 지역에 어디를 포괄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207-208)

그리하여 ‘동아시아’는 그것을 호명하는 주체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애초에 서로 다른 지리적 범위와 가치적 정향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사고와 실천의 당위로서 삼으면서 자본주의체제와 국민국가의 질서를 뛰어넘는 능동적 개입과 연대 가능성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곧 이른바 비판적 지역주의의 출발점이다.

『대안체제의 길』은 대안체제론을 다루되 역사적 계보화와 실천적 기획으로 논의 소재를 나누어 각 2개의 부에 할당한다. 제1부에서는 프롤로그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 시기의 유력한 종합잡지였던 『개벽』이나, 해방 이후의 『청맥』 및 『창작과비평』과 같은 담론운동의 진영들이 보여 주었던 동아시아론을 하나로 이어 선분을 긋는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상사에서 변혁의 힘을 쌓아 오면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제2부에서는 이 같은 동아시아담론이 저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떤 자극을 얻고 이론적 세공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가운데 ‘이중적 주변’, ‘핵심현장’ 등 개념과 ‘복합국가론’이 지닌 실효성 및 가능성

을 제5장부터 제7장에 걸쳐 재진단한다. 비록 세간에서 동아시아담론이 철 지난 유행으로 치부될지언정 그 시효가 마저 다한 것은 결코 아니며, 특히 근래의 미중경쟁의 신냉전과 문명대전환 시기에 적실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줄 자산인 까닭에 ‘리부트’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2. 사상사적 지정학과 동아시아 독도법

첫머리에 배치된 만큼, 안중근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의 아키타입을 마련한 이로 소개된다. 그는 조선의 독립이 동양의 평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있다고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평화론과 비판적 문명론을 조화한 동양평화론을 설파했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조선 내부에서의 계몽운동이나 조선만의 대응으로는 이루지 못할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즉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야 할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린 데 대한 항의이자 국내외의 만인을 일깨워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을 제시하려 한 시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행의 배경에는 한·중·일이 강한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대등하게 이를 연합에 관한 안중근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유학의 전통사상과 가톨릭을 습합한 데서부터 모든 인류의 존엄과 평등을 꿈꾸는 세계시민의 개념을 아시아에서 구체화하는 데 이른 경지라고 저자는 평한다.

이 같은 안중근의 사례로부터 본서는 대안체제론을 판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형식적 기준을 마련해 낸다. 첫 번째가 대개항으로서의 중국이다. 봉건성의 원천이자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는 ‘천한 중국’에 관한 인식이 있다면 이에 상대되는 것으로는 현재성을 지녔기에 늘 참고 대상으로 상징되는 ‘개혁모델로서의 중국’, 함께 근대를 갱신할 ‘협력자/동반자로서의 중국’에 관한 인식이 있다. 두 번째는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 혹은 변혁운동에의 참여 여부다. 실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며 운동의 효과

를 노리는지가 주된 관건이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삼층(제국-지역-민족)의 공간인식이다. 여기서 아시아주의(지역주의)와 민족주의가 제국주의(혹은 근대의 폭력성)에 침윤되지 않은 채 중용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테면 지역주의와 제국주의의 결합에 저항적 민족주의가 맞서는 일은 일견 정당성을 띠더라도 결국 후자가 지역을 포용하지 못하면 배타성만을 품을 위험이 큰 까닭이다.

위의 세 규준은 서로 어우러져 정세론과 문명론을 이룰 텐데, 본서는 동아시아담론마다 내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살펴 대안체제론에 준하는 사례들을 지난 세기의 역사로부터 발굴해 내고 순차적인 연속이 확인될 수 있게끔 배치한다.

이때 특히 『개벽』의 경우, 천도교도이며 재중특과원이었던 이동국의 활동과 중국관에 주목하게 되면서 더욱 풍성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동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정세와 문화를 분석하고 이를 조선이 주체적으로 취할 진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그는 영·미·일의 이권투쟁 현장이자 피해당사자 측인 중국과의 제휴를 독자에게 강하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고전’과 ‘현실’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천대하는 제국적 시선을 뚜렷하게 상대화하고 중국의 변혁에 동조하는 참여자의 입장에 섰다. 중국의 정세 변화에 관해 예민한 관심이 당대에 줄곧 이어져 왔다고 하여도 대중의 중국 표상은 만주사변에서부터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지나며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타자로서 굳어져 가게 되었고, 차츰 식민지/제국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주창된 동아신질서 및 동아협동체와 같은 담론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변혁모델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만다. 이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1920년대 초반 『개벽』이 취한 동아시아담론의 신선함이 식민지 시기를 통틀어 더욱 도드라지는 것일 터이다.

해방 후 아시아는 미국 주도하에 반공적으로 재편되는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남한의 지식사회에서 아시아의 표상은 후진의 열등한 가치를 지

녀서 벗어나야 할 무엇이거나, 혹은 서양 문명 너머의 인류에 실현을 위한 가치의 보고로 여겨지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단지 발전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침을 겪는 대안체제론의 양상을 본서는 『사상계』와 『청맥』의 대조 안에서 발견하여 기록한다.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두 진영의 논의가 다소 보족적인 성격을 띠며 대안체제론의 숙성에 기여했다는 비판에 가 닿는다. 요컨대 『사상계』가 예의 ‘고전’과 ‘현실’의 분리를 고수하며 변혁모델로서나 동반자로서 중국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공이 아시아를 붉게 물들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머물며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다루었다면, 『청맥』의 논지는 그와 사뭇 달랐다. 『사상계』가 서구적 근대화 길에 치중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달리 『청맥』은 제3세계 민족주의와 연대하여 세계적 냉전질서 및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구상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며,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거부와 함께 민중이 주도하는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면모가 보인다. 그런데 『청맥』은 제국주의적 근대가 빈곤이나 후진성을 주변부에 강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했더라도, 그 인식구조의 단순성을 넘지 못한 데다 태생적 한계 탓에 분단체제 재생산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묻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 자기의 대안체제 구상을 문화운동이나 대중실천으로도 이어 갈 수 없었던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된다.

이상의 검토 후에 이른바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종합하여 수행한 주체로 꼽히는 것은 『창작과비평』이다. 이러한 배치는, 흔히 1990년대가 시발점이라 여겨지던 『창비』 계열의 대안체제론으로서의 동아시아담론을 그 이전 냉전 시기부터인 것으로 소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선 것들을 자양으로 흡수함으로써 장기간에 이뤄진 변혁적 실천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다. 실제 『창비』의 지면이나 필진의 여타 문필 활동들은 냉전의식을 무너뜨리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베트남 전쟁 및 현실 중국에 대한 객관적 보고를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스라엘 대 아랍국가 간 전쟁과 분쟁을 제3세계적 입각점에

서 살피도록 하기도 하고, 한-미-일의 국제 정세가 한국 사회 내부의 역사 및 현황과 맺는 연관을 정밀히 분석하여 그전까지 만연했던 일국적 시야와 ‘친미반공’이라는 인식의 구속복을 탈피할 수 있게 한 것은 대표적 예시다. 요컨대 『창비』가 구심점이 된 비판적 지식인 네트워크는 냉전의 양진영 모두에 대해 비판을 취하고 제3세계, 민족 등 개념을 탈실체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고를 유연하게 쇄신해 가며 민족·민주·민중을 의제로 삼아서 대안담론의 영역을 구축해 갔다는 것이다.

3. 탈냉전기 동아시아담론 현장과 다원적 변혁 주체

탈냉전 시기 『창비』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응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담론 실천과 연대 운동의 본격화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점차 개혁모델로서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서 유력한 행위자이면서도 세력균형의 축으로서, 또한 민간에서 이뤄지는 동아시아 연대의 주요 동반자로서 재인식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저자의 적실한 지적처럼 연대운동을 통해 변혁 주체를 확대해 가는 일이 근대(성)의 극복 및 적용을 겸한 이중의 단일 기획을 수립하는 일과 유기적인 조화가 추구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성취를 키워 나갈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대안체제의 길』이 구축하여 제시하는 동아시아라는 비판적 지역주의는 ‘대안문명론’이라 불리는 태도와 달리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대의 상당한 성과라 할 만한 것들 중, 예컨대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보편적 인권의 추구 등은 여전히 모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터이다. 그럼에도 사유와 실천의 융합이나 개인수양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로에서 혹시라도 ‘보편’이라는 어휘와 가치가 서구중심성을 도드라지도록 만들게 된다면 이를 ‘도’(道)라는 익숙한 관념으로 전유함으로써 편향성을 경계할 수 있지 않겠

느냐는 본서의 제안(236)은 자못 흥미롭다. 특히 중심에서부터 멀어져 가며 계서를 이루는 ‘이중적 주변’ 구조가 있고 그에 따른 ‘억압이양’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강화하는 힘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민한 주의가 이 전유의 제안에 깃들어 있는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그사이의 어느 편에 위치하는가 하는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중앙의 사고방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자신보다 한층 더 주변적인 부분을 차별하고 억압하며 그러한 억압이양을 의식하지 않는 ‘중앙으로부터의’ 시각을 접수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주변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차별당함을 문제 삼고 동시에 자신이 한층 더 주변적 부분을 차별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중앙의 문제됨을 다시 묻는 자세를 취하는가의 선택이다.(212)

중심-주변으로 파악되는 공간 질서와 관계는 기실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맥락적 역할이나 기능은 마치 프랙탈처럼 때와 자리를 옮겨가며 끊임없이 연쇄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러한 구도 안에 놓여있음을 자각한 주변적 주체가 윤리적 태도를 정향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을 상정한다. 또한 그런 결단이 더욱 유의미한 실천과 맞닿기 위해서는 역사적·공간적 위계에 대한 정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곧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주변들이 하나의 억압적 구조 안에 연동된 채로 포섭돼 있다는 사실로부터 주변들 간 공유하는 동질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기댄 공감에서부터 민족주의를 넘어 지역주의로 확장되자 서로 연대하는 동아시아로 다시 서게 만들어 주는 ‘핵심현장’에 대한 감각과 연관된다.

10여 년 전 오키나와 후텐마에 미군기지 이전이 무산되도록 결정되는데 한반도의 천안함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중심축 이동에 의해 위계 지어진 지정학적 질서가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요컨대 오키나와에서 혹은 서해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주체

의 체험 속에서 빚어질 때 구조적 위계와 역사적 폭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핵심현장은 이러한 각각의 순간과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유를 위한 비장소(非場所)를 가리킬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새로운 연대와 주체들의 형성을 겨냥하면서 저 구체적 시공간들을 포괄하는 전체성을 또한 띠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합국가’에 관한 저자의 심도 있는 고찰이 여기에 덧붙여진다. 이로써 ‘개인과 국가의 이분법’이나 ‘탈국가적 강박’에 머물기를 거부하면서 비국가적 주체들이 횡단·초월·변형하는 역할과 방식(268)을 그는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구성적 외부와의 상호 성찰 가능성

살펴본 것처럼, 『대안체제의 길』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비판적 지역주의의 계보를 선명하게 그려 보이며 굳건한 역사적 유산으로 만들려 하는 기획이다. 이것은 여러 형태를 띠며 분화되었던 동아시아담론이 1990년대 이래 다양한 요청에 응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활황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에 비해 정작 그 내실은 점차 “모호한 채로 알만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회고와 지적²⁾에 대한 반응이기도 할 것이다. 대안체제론을 정식화하기 위해 시도된 스케치 과정에는 저자가 동아시아를 이념화하는 사유와 실천의 전기들을 함께 담았기에 확실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그 자신의 인식 지평이 확대되는 경험이나 그가 사상적으로 분투하는 국면들이 어떤 개념화 작업이나 사유의 논리를 수반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라는 범주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떤 것이든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범임을 다시금 일깨운다. 종종 오인되어 온 동

2 윤여일(2015),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352.

아시아의 실제성(즉 고정성)도, 그 실제성이 바탕에 두고 있었던 것이면서도 정작 은폐되어 버렸던 가변성도 연결에 의한 관계의 생성이 필수적이었던 면에서 그러하다. 이를테면 ‘민족문학사’와 같이 지위를 공고하게 확보할수록 순정한 성격을 스스로 가장하는 자기지(自己知) 역시 실제로는 매개되고 포함해야 할 복수의 외부가 없었더라면 절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환기하는 이유는 근대적 가치, 사상, 제도나 그에 대한 응전의 양식들까지도 함께 유입되어 온 통로가 ‘현해탄’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가리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만으로 20세기 역사를 살피는 중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단차원적인 지정학적 상상에 머무는 불실성함을 수반하기 일쑤다. 확실히 우리에게 근대는 중화(中華) 질서와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개시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전개된 중국의 학술, 사상, 운동들은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1900년대의 량치차오에 대한 박은식, 신채호 등의 번역이나,³ 유물사관에 힘입어 귀모뤄가 재서술한 중국고대사를 참고하여 김태준에 의해 기술된 1930년대의 조선의 한문학사 및 소설사의 경우나,⁴ 루쉰 등 근대 중국의 문학 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해방기에 번역하여 소개하던 이명선에 의해 새로 쓰여질 수 있었던 조선문학사 등의 사례가 말하여 주듯,⁵ 한국의 근대는 복수의 구성적 외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대적 체제 및 가치에 대해 ‘적응’과 ‘극복’의 변증을 시도하는 중에 다양한 주체화를 분명하게 경험했다.

그러한 만큼 역사의 정확한 기억이나 미래를 향한 기투에서도 과행성을 면하기 위해서라면, 『대안체제론의 길』의 저자가 힘주어 당부하듯, 중국이라는 매개항의 존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중 대결 뒤에 놓인

3 손성준(2013), 「전기와 번역의 ‘중황’」, 『현대문학의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4 이용범(2014), 「金台俊과 郭沫若: 한 고전학자의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연구소.

5 김준형(2005), 「열전: 길과 희망: 이명선의 삶과 학문세계(上)」,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김준형(2005), 「열전: 길과 희망: 이명선의 삶과 학문세계(下)」, 『민족문학사연구』 29, 민족문학사연구소.

세계체제의 전환 상황이나 전 지구가 당면한 기후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중국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창발하고 확장해야만 할 것이다. 짐중하는 ‘반중’이나 ‘혐중’의 정서가 근거로 삼고 있는 ‘천한 중국’ 인식이 아니라, ‘개혁모델로서의 중국’, ‘세력균형의 축으로서의 중국’ 말고도 ‘상호 성찰하는 거울로서의 중국’을 향해 재조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여기에 정당하게 놓인다.

5. 학술로서의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학술은 대개 특정 대상이나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식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체계의 자족성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산출해 내려는 욕망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기예’(技藝)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곤 한다.⁶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도 그중 하나라 할 것이다. 억압이양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비판하고 성찰하는 주변이 지배 권력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다원화된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대안체제론은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배권력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윤리적 성찰이 다시 현실의 구체적인 실천과 연계가 확고하지 않다면 학술이 욕망하는 산출은 가상에 머물 위험이 크다.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억눌렸던 정치열이 폭발한 해방기에, 전공과

6 필자는 해방기의 지식과 담론들이 국가, 국민, 민족 등을 주조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던 사례들을 포착하여 고찰하고 이것을 “‘기예’로서의 학술(學術)”이라 제한적으로 일컫는 바 있다. 기예로서의 학술이 지닌 자율성은 국가 바깥에서 국가를 창출하려 한 ‘조선학술원’에 의해 해방 직후 정점에 이르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분단이 공고화하면서 학술이 국가 내부로 포섭되자 그러한 자율성은 점차 감퇴하거나 다른 의미로서 재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장지영(2020), 「해방기(1945~1950) 학술의 지정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식인들이 집결하여 조직한 ‘조선학술원’은 학술의 기여적 성격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들은 창간호로 그친 조선학술원의 유일한 기관지인 『학술』을 통해 국가이성의 청사진, 즉 일종의 대안근대적 상상을 펼쳐 보인다. 그러나 국가 없는 자리에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기조와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무색하게도, 조선학술원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들의 근대 적응과 극복에 관한 구상은 사실상 사장되고 말았다. 이것은 조선학술원이 현실의 정치·행정적 부면이나 여타의 거버넌스와도 별다른 연계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미소공위의 결렬, 남북 분단의 가시화 등으로 냉전적 상황에 끌려 들어가 버린 결과이기도 했다.⁷

한편 1990년대의 대안체제론은 혁명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기대가 쇠퇴한 이후 저항의 역사라는 메타 서사를 회생해 보려는 시대적 욕망의 지지를 얻고 동아시아를 심지로 삼아 발화(發火)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본다. 이처럼 추측하여 진단하는 것엔 물론 ‘장구한 변혁’으로서의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 가지고 있었던 시의성이나 윤리적 성찰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뜻은 없다. 그럼에도 담론 실천을 통해 근대의 억압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시도들을 향한 지나친 고평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탈냉전과 민주화 시기 이래 근대성을 화두로 삼아 이뤄진 탈근대주의적 고찰과 연구들은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면서 지배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들은 제도와 담론의 형태를 띤 권력 이야말로 구성된 것이라 일컫고 그러한 만큼 그것이 유연하다는 뜻이 다루었다. 하지만 그러한 구도와 태도가 결과적으로 권력 구조를 오히려 공고한 실체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⁸ 역설

7 장지영(2020), pp. 46-58.

8 각종·각양의 ‘포스트’주의들이 역사적 경험들을 고고학적 탐사의 배경이나 자원으로 삼았지만 정작 혁명과 그것이 품은 저항 가능성마저도 후경화하고 매몰해 버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다는 아리프 딜릭의 지적은 그래서 통렬하다[아리프 딜릭(2005), 황동연

적으로 등장하게 된 ‘구성된 것이지만 너무나 단단한’ 이것에 대한 반발이 그 역상으로 취한 것은 담론 실천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과장이 아니었을까? 억압적 구조가 지배적이어서 균질한 담론과 동일자만을 반복하여 생산한다고 여겨질 때, 그 가운데 솟아난 이질적인 발화와 상상이 동일성의 세계에 파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리는 종종 말한다. 다른 상상, 다른 목소리가 보여 주는 이채로움에는 분명 억압적 현실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의 윤리적 정당성이 가져다주는 매혹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매혹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로 그 자리가 현실의 행위자들 간의 동역학을 고려하되 어떻게 실천 공간을 마련하여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고비일 것이며 실로 어떤 대안체제론일지라도 더욱 심원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명대전환 국면이라는 거대한 파랑(波浪)에 올라타 쓰러지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형세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 이 험한 노정에서 『대안체제의 길』의 독자 모두 앞선 이의 안내를 받아 기꺼워하며 그 기여적 실천이 성공하기를 응원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형(2005), 「열전: 길과 희망: 이명선의 삶과 학문세계(上)」,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연구소.
- 김준형(2005), 「열전: 길과 희망: 이명선의 삶과 학문세계(下)」, 『민족문학사연구』 29, 민족문학사연구소.
- 덜릭, 아리프(2005), 황동연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창비.
- 백영서(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나남출판.
- 손성준(2013), 「전기와 번역의 ‘중형’」, 『현대문학의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 윤여일(2015),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범(2014), 「金台俊과 郭沫若: 한 고전학자의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구』 56, 민족문화사연구소.

장지영(2020), 「해방기(1945~1950) 학술의 지정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